

'23. 2. 16.(목) 14:00

영 상 회 의

제15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(임시회) 회 의 자 료

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

목 차

I . 개 요	1
II . 회의안건	3
①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논의	4
②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('23.3.3.) 관련 보고	6
③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세미나 계획 보고	7
III . 위원회별 주요 사업동향	9
① (대전)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 운영	10
② (세종)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식 개최	12
③ (충북) 2023년 사무국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	13
④ (경남) 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	14

제15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(임시회) 개요

□ 회의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3. 2. 16.(목) 14:00~15:30 / [영상회의\(ZOOM\)](#)
- 참석 대상 :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18명
- 주요 내용 :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논의
- 시간 계획

시 간	내 용	비고
14:00~14:05 5'	○ 모두발언 (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)	
14:05~15:25 70'	○ 안건토의	
15:25~15:30 5'	○ 마무리말 (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)	

□ 회의안건

- ①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논의
 - 협의회-자치경찰분과위원회 간담회('23.1.19.)
 -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('23.2.7.)
- ②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('23.3.3.) 관련 보고
- ③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세미나 계획 보고

□ 위원회별 주요사업 동향

- ① (대전)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 운영
- ② (세종)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식 개최
- ③ (충북) 2023년 사무국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
- ④ (경남) 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

회의안건

1

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논의

□ 협의회-자치경찰분과위원회(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) 간담회

○ 일시 / 장소 : '23. 1. 19.(화) 15시~16시 55분 / 정부서울청사

○ 참석자 : 총 17명

- 협의회 : 10명(임원진 6명, 인천, 세종, 경북, 제주 위원장)

※ 강원 신운창 위원,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참석

- 자치경찰분과위원회 : 5명(김선택 위원장, 강기홍 위원, 이상훈 위원, 우지완 행안부 경찰국 자치경찰지원과장, 임윤상 경찰청 자치경찰지원계장)

○ 주요 내용 : 이원화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방안

구분	주요 의견
전북	-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는 자치경찰사무로 하되 사·도지사에게 권한을 줘야 함. - 시·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어야 원활한 협업이 가능함
충북	- 보충성의 원리, 책임성의 원리, 기능배분의 원리 등에 따라 13만 경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, 재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길 바람
강원	- 초동수사권, 인력이관, 시설·장비 사용 등에 대한 단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.
대전	- 지구대·파출소 소속 이관 등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함.
울산	- 시민이 자치경찰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람
인천	- 경찰청 자치경찰 부서 인력(147명)을 자치경찰위원회 인력현실화를 위해 이관해야 함.
경북	-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적 사고보다는 경찰행정을 어떻게 분리하느냐에 따라 마련되었음. 지방분권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함.
세종	- 자치경찰의 수사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누구의 수사 지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, 사전 검토되어 큰 틀이 마련되기 바람.
제주	-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애걸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제도로 가기 어려움.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기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.
제주자치경찰 단장	- VIP의 의지, 경찰청의 수용, 시민들의 필요 등이 충족될 때 이원화가 제대로 추진될 것임.
강기홍 위원	- 자치경찰 사무를 교통관리 등 질서유지 행정으로 볼 때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해지므로, 이런 관점에서 수사권 문제를 바라봐야 함
김선택 위원장	- 자치경찰이 제대로 되려면 자치경찰 조직이 있어야 하고, 국가경찰의 일부 조직을 자치경찰에 양보할 수 밖에 없음. 다행히 경찰청 수뇌부는 협조적으로 보임. - 자치경찰의 초동대응을 위해 수사권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음. 수사권한 문제는 복잡하므로, 국가수사본부와 논의를 해야 함.
이상훈 위원	- 현 일원화 제도의 문제점과 이원화 모델 마련 등 two-track으로 추진하고 있음. - 시·도 위원장님들이 우려하셨던 현 제도의 문제점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겠음.

□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

○ 일시 / 장소 : '23. 2. 7.(화) 14시 / 정부서울청사

※ 경찰제도발전위원회 : '22. 9. 6.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, '23.3.5일까지 활동

○ 주요 논의사항

①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및 발전방안

-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,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 논의됨

※ 자문위원회 :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으로, 법적 구속력 無
 행정위원회 :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띤 합의제 행정기관.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집행가능

② 경찰대학 개혁

-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
-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

③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논의

- 그간 논의경과 정리,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 보고

※ 행안부가 제시한 로드맵 안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함, 회의자료 비공개

실천과제	연차					
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
자치경찰권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범정부 협의체 구성 •제주·세종·강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제주·세종·강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한 특별법 개정 •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대비 방안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제주·세종·강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•시범실시 성과 분석및제도개선 •자치경찰제 이원화 전면 시행을 위한 법령안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「지방자치법」 및 「경찰법」 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•시행 성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마련

언론보도(시사뉴스, '23.2.11.)

- ▶ (자치경찰 이원화) 궁극적으로는 조직과 예산까지 이원화하는 방안 등이 적용 가능 시점과 함께 검토됐지만, 자치경찰을 이원화했을 때 뒤따르는 책임소재 문제 등이 얽혀있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.
- ▶ (8차 회의계획) 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8차 회의에서 최대한 의견을 좁혀보겠다는 계획이지만,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. 박인환 위원장은 “종국적으로는 입법문제”라며 “어떤 제도든 명암이 있는 만큼 방향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○ 향후 계획 : 8차 회의 개최('23. 2. 28.(화))

2

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('23.3.3.) 관련 보고

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'23. 3. 3.(금) 13시~17시
- 장 소 : 엑셈 마곡신사옥(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5길)

※ 예산 지원 등 협의 이후 세부일정 공지 예정

○ 주최

: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, 경찰청,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, 한국경찰연구원 공동주최

○ 주제 :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, 어떻게 할 것인가

□ 회의내용(안)

구 분		주 요 내 용	비 고
개회식	개회사	○ 김선택 위원장	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
	환영사	○ 이황우 명예교수	동국대前 경찰위원
	축 사	○ 윤희근 청장	경찰청
	축 사	○ 김학배 회장	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
강연 및 토론	기조강연	○ 안성호 이사장 「자치경찰제 성공의 길 : 다중심거버넌스의 비밀」	前 한국행정연구원장
	발 제	○ 장일식 박사 「현행 자치경찰제 시행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」	치안정책연구소
		○ 이상훈 교수 「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추진 방안」	대전대
		○ 김홍환 박사 「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지원 방안」	한국지방세연구원
종합토론	○ 좌장 : 임도빈 교수(서울대 행정대학원) ○ 토론자 : 남재성 교수(원주 한라대), 박준휘 부원장(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), 이재원 교수(부경대), 강기홍 교수(서울과학기술대)		

□ 추진배경

- 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자치경찰 정착 및 이원화 모델 도입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 및 전략 모색
- 출범 2주년 즈음, 위원장·사무국장 연석회의 추진

□ 행사개요

- 일시/장소 : 2023. 5월말~6월초 1박 2일(목, 금) / 부산시청 국제회의실
- 주제 : 자치경찰 정착 및 이원화 방향
- 주최 :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
- 참석규모 : 100명(시도자치경찰위원장,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)

□ 주요 프로그램(안)

- 1 일차 (13:00 ~ 20:00)
 - ① 부산자치경찰 성과와 과제 발표 및 정책세미나(14:00 ~ 16:00)
 - 주요참석자 인사말씀(개회사, 환영사)
 -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기원 세러머니
 - 부산 자치경찰 성과와 과제 발표
 - 정책세미나 발표 및 패널토의
 - ②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및 만찬 (17:00 ~ 20:00)
 - 장소: 광안리, 참석: 위원장 및 사무국장 (연석회의)
- 2 일차 (08:00 ~ 14:00)
 - 조식 : 광안리 인근 식당
 - 2030 부산엑스포 예정지(북항 등) 견학
 - 시도자치경찰위원장·사무국장, 수행직원 오찬

□ 협조사항

-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「2030 부산 엑스포」 유치기원 동참

위원회별 주요사업 동향

1

대전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 운영

※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 : 교통사망사고 분석·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해결 시스템

추진배경

-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-경찰청-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, 효과적인 교통사망사고 예방·감소 대책 추진
- 각 기관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, 사고 현장에서 합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,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

추진 내용

- (구성) 市교통정책과(교통안전팀)·대전경찰청 교통과(교통안전계) 중심 관계기관 실시간 네트워크 및 핫라인(유·무선) 구축

기관별 주요 임무

(경찰청·경찰서)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단속 등 맞춤형 교통안전활동 전개
 (대전시·자치구) 교통안전시설 및 가로등 개선·확충 대책 추진, 관련 예산 지원
 (도로교통공단) 컴퓨터 시뮬레이션 활용,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안 설계
 (자치경찰위원회) 솔루션팀 운영 및 현황 모니터링 등

- (운영 시기·장소) 사고발생 익일 14:00 / 사고 발생 현장
 ※ 주말 및 공휴일 발생 시 돌아오는 평일 14:00 시행
- (주요 내용)
 - 유관기관 합동 정밀 교통안전진단 실시, 원인별 해결 방법 도출
 - 교통(사망)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·확충 대책 추진
- (업무 흐름도)



추진 경과 ('21.7월 시행 이후 사망사고 솔루션 77회 운영 / '22년 말까지)

- 횡단보도 조명탑 설치, 도로 위 장애물 제거 등 교통안전시설 지속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망사고 건수 10건 감소(*'21년 57건 → '22년 47건 / 감소율 17.5%)
- ⇒ 교통사망사고 사망 감소율 전국 1위, 경감 특진

향후 계획

-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분기별 이행 점검
- 대형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진단 참여 지원 등

참고

솔루션팀 합동 운영 사례

□ 솔루션팀 개선 사례

구분	운영 및 개선 전	운영 및 개선 후	사고 현장 약도(예)
현장 사진			
내용	우회전 신호등 가림막(수목) 제거		
현장 사진			
내용	보행자 횡단보도 조명탑 설치, 조도 개선		

⇒ 솔루션팀 개선 지역 중 교통 사망사고 재발 사례 없음

□ 솔루션팀 운영 현장 참석 및 기타 참고 사항

	<p>중부매일 대전시 교통사고 사망자 4년 연속 감소... 2018년 대비 33% 줄어</p> <p>대전시 교통사고 사망자 4년 연속 감소... 2018년 대비 33% 줄어</p> <p>대전시 교통사고 사망자 4년 연속 감소... 2018년 대비 33% 줄어</p>	<p>대전 > 대전충남 대전충남, 전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연이던데 주민</p> <p>대전충남, 전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연이던데 주민</p>
<p>사망사고 솔루션팀 운영 현장 참석</p>	<p>언론보도 등</p>	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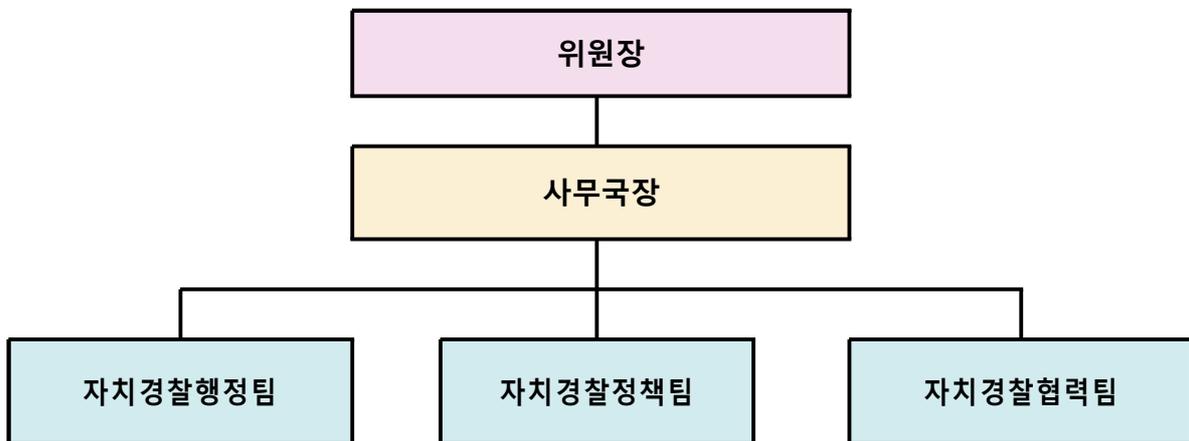
[세종]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식 개최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*에 따라,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및 위원 상임화 추진

* 제36조 세종시 특례조항(비상임, 세종경찰청 사무처리) 삭제 : 시행일 '23. 2. 16.

□ 주요내용

- (사무체계 전환) 세종시 소속 사무국 신설 및 위원회 사무 세종시로 이관
- (사무국 조직)



- (인력) 현원 15명 / 정원 11명(상임위원 2, 시 7, 경찰 2), 파견 4명*

* 법령상 경찰공무원 정원 2명(경정, 경위), 정원 외 파견 2명(경감, 순경), 교육행정 2명

□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식

- (일시·장소) 2.16.(목) 14:00 ~ / 위원회 사무실(4층), 경찰청 회의실(5층)
- (참석인원) 41명(세종시장, 세종경찰청장, 시의원 등)
- (주요내용)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식 행사 및 현판 제막식

3

[충북] 2023년 사무국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

□ 연찬회 개요

- 준비기간 : '23. 1. 1. ~ 1. 31.(1개월간)
- 일 시 : '23. 2. 3.(금) 09:00 ~ 13:00
- 장 소 : 소회의실
- 참 석 : 29명(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전직원)
- 주요내용 : 개인별 연간 업무계획 보고, 업무 매뉴얼 공유, 팀별 로드맵 수립, 업무량 분석, 정책방향 설정 등

□ 연찬회 세부내용

- 연관계획 보고 및 토론

구 분	주요 내용
자치경찰 행정과	< 실질적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위원회 기반 강화 > - 부서 성과지표 운영, 후생복지제도 전직원 확대, 연간교육계획 수립, 포상 확대 -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및 SNS 운영, 충북지역치안협의회,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등
자치경찰 정책과	<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수립 및 인권 개선, 반부패 청렴 강화 > - 범죄예방 안심부스 설치사업,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- 함께해요!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 사업, 가정폭력 상담 지원 확대 -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만들기, 고령자 인식개선, 청렴 인권작품 공모전 등

- 정책대안 도출

- 직원별 업무량 확인 및 대안 모색
- 사업에 맞춘 예산 확보, 경찰서(장) 평가지표 설정에 자치경찰 방향 제시
- 해외 및 사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계획 수립, TBN(교통방송) 등 언론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전략 수립 등

- 행사사진



□ 향후계획

- 자치경찰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개별 정책 수립에 반영

□ 추진배경

-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자치경찰정책의 방향 설계 필요
- 경남 지역특성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 중심의 다양한 치안 서비스 발굴

□ 구성 및 회의 운영

- (명 칭) 「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」
- (구성근거) 「경상남도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3조
「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안」
- (구성인원) 10명 [붙임] 위원 프로필 참조
 -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, 연구위원
- (위원임기) 1년 (별도 통지 없을 시 1년 자동연장, 연임 2회 가능)
- (역 할)
 - 주요 치안 정책의 방향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사항
 - 지방행정 및 경찰행정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사항
 - 자치경찰정책 관련 정책발굴 및 연구과제 직접 수행·검토
- (회의운영) 분야별 ‘개별’ 자문 중심(필요시 소집·서면회의 병행)
 - (회의주재)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(사무국장)
 - ※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자치경찰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
 - (회의소집) 수시개최(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)

붙임

정책연구위원회 위원 프로필

사진	소속·직위	성명	비고(분야)
	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	황문규	
	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	배화옥	사회적약자 보호
	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	신진희	
	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	유주성	자치경찰 및 거버넌스
	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연구위원	허준영	
	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박병욱	
	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	장광호	빅데이터 분석 및 범죄예방
	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	김도우	
	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	정연대	
	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시설부장	김봉기	

□ 회의개요

- (일시/장소) '23. 2. 8.(수) 14:00 / 화상회의(ZOOM)
- (참 석 자) 9명
 - (자치경찰위원회) 황문규 사무국장 등 4명
 - (정책연구위원회) 5명[김도우 위원(경남대 경찰행정학과), 박병욱 위원(제주대 행정학과), 장광호 위원(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), 정연대 위원(중부대 경찰행정학과)]

□ 주요내용

○ 2023년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

【주요사업】

①우리동네파수꾼 사업 확대 추진 ②도민안전 생활실험(리빙랩) 사업계획 ③아동안전지킴이 운영
 ④가상현실 플랫폼 활용 아동학대·성범죄·학교폭력 예방 교육 ⑤'집에서 학교까지'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⑥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

【신규사업】

①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지원사업
 ②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사업

□ 주요 정책제안

① 주요사업 정책제안

위원	정책제안
김도우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방식, 인력 선발 과정 등 전반적인 점검 필요 • 도내 전 시·군 대상 추진 사업이 아닌 경우, 지역별 치안서비스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 선정 과정에 투명한 절차 필요
박병욱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조직(시도경찰청(서), 지구대, 파출소 등)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필요
배화욱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동네파수꾼 인력의 활동 영역(교내) 확대 • 가상현실 플랫폼 활용 교육 활성화 계획 및 교육 콘텐츠 보강 필요
장광호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참여 공동체 치안활동 사업 추진 시 주민 간 소통채널*(메신저 등) 필요 * 경찰대학 모바일 범죄위험지도(MYPOL) 이용 건의
정연대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SPO 등 교내 방문교육 확대 건의

② 신규사업 정책제안

- ▶ (교통경비) 킥보드 이용 어린이 수 증가에 따른 킥보드 교통안전 교육 사업 제안
- ▶ (여성청소년)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사업 추진 시 기관별(자경위도경찰청(사)·경호업체) 역할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이 아닌 협력협업적 사업 추진 필요

□ 향후계획

- 소관 담당별 정책제안 공유 및 정책추진 반영여부 검토

□ 회의 사진 · 보도자료

총괄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

□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활동으로 일상생활 안전 확보

- 「찾아가는 치안행정 서비스」 우리동네파수꾼 공모사업 추진 (23. 6월 ~ 12월)
 - 5개 군 대상 파수꾼 선발(2만 1천) 및 마을 순찰도비 80백만원 군비 120백만원
- 「함께 만드는 안전e음」 도민안전 생활실림 (23. 5월 ~ 12월)
 -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실림(Living Lab) 운영

□ 아동·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맞춤형 경찰 활동

-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아동학대·성범죄·학교폭력 예방 교육(23. 1월~12월)
 - 초·중·고 학생·일반인(교육대상 확대) 대상 범죄예방 교육자료(45종) 제공
- 등하굣길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(23. 1월~12월)
 - 도내 초등학교(510개교) 주변 아동범죄 예방활동 전개
- 스트링 등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지원 사업(23. 3월~12월)
 - 도내 경찰서 권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추가피해 위험이 현저한 자 ※ 소요예산 7천만원 (도비)

□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 및 질서 확립으로 교통안전 체고

-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(교통안전 시설개선 3년간 1,364개소)
- 「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」 조성사업 추진(302백만원)
 - 우회전 신호등 설치사업, 합동형 LED표지병 설치사업 추진
- 어린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사업 추진(320명)
 - 아동기부터 교통안전 의식 함양 → 성인이 되어서도 교통안전 수칙 준수

- 4 -

